

광주다움 통합돌봄…누구나 누리는 보편돌봄 체계로

시, 지원대상 77.6%로 늘어

국비 13억 등 총 90억 확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 신청하면 끊김 없이 연결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6년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적 돌봄체제로 완성된다.

광주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 돌봄 체계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

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체제로,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4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원 이하까지 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전액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본인부담 30%, 120~160% 구간은 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과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 150만원은 유지된다.

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한 준비도 마쳤다.

전국 돌봄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광주시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돌봄’을 시민의 돌봄 진입창구로 삼아 보건복지부에

산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비 13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체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돌봄 수요자도 추가 발굴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강점은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통합돌봄을 시작한 다른 지역이 평균 7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광주

는 13종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돌봄을 비롯해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과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약물 부작용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퇴원환자 돌봄 연계도 강화된다. 광주시는 수술이나 병원 퇴원 직후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해 병원을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치구로 즉시 연

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현재 49개 2·3차 병원과 요양병원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집중관리군을 선별하고,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이용 현황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서비스를 재연계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를 지향해 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민

민주, 지선 앞 ‘클린선거 암행어사단’ 띄운다 | 공천과정 모니터링…부정·의혹 차단 ‘공천신문고 제도’와 함께 연동 운영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신문고’를 마련하고 ‘클린선거 암행어사단(공천 암행어사단)’을 띄우는 등 등 공천 쇄신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선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과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 대표부터 철저히 공천 과정을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천 암행어사단은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 산하에 설치된다. 단장에는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임명됐다.

정 대표는 “암행어사단 단원은 시도당별로 한 명씩 비공공 요원을 선별해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며 “공천신문고 제도와 같이 연동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신문고는 각 지역별 시도당에서 컷오프 된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재심 청

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회생 제도’다.

기존에 시도당에 부여된 컷오프 후보자들의 재심권을 중앙당이 행사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심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암행어사단과 공천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접수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윤리심판원에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당 대표 직권으로 비상장계를 즉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공천 쇄신안을 발표한 배경으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공천현금’을 수수했다는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는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일을 통해 전화위부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면서 “(공천 과정에서의) 일탈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공천 암행어사단을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일탈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도당위원장·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 공개한 ‘무한도전 4무(無)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편으로 ‘공천 현금’ 의혹으로 인한 파장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강 의원의 경우 당에서 제명 조치했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을 윤리감찰단 조사 대

상에 올렸다.

공천 관련 금품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은 지난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지 6일 만에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총선 당시 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며 탈당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당이 결정할 때”라며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24년 총선 전 이재명 당 대표실이 김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의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정달성 특보, 광주 북구청장 출마 선언

“정치·행정 혁신…새로운 북구 만들 터”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사진)가 5일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특보는 이날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정치·행정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넘을 수 없고, 북구의 판을 바꾸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AI 대전환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혁신 공약으로는 △AI 대전환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보완과 영유아 단계적 무상복지



△관광·문화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침수 ZERO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광주역, 31사단 등 도시구조 개조를 통한 성장기반의 재정비도 핵심 비전으로 꼽았다.

정달성 특보는 “과거의 관행 답습이 아닌 혁신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구청장, 일상에서 답을 찾는 현장형 구청장, 새로운 북구를 만드는 성장형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귀순 시의원, ‘마을에서 배운 정치’ 출판기념회

10일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의정활동 경험 담아

이귀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4·사진)이 10일 오후 3시 광주여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정치철학과 마을에서 배우고 경험한 의정활동을 담은 저서 ‘마을에서 배운 정치’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해당 저서는 ‘자치가 진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경험한 이 의원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다. 단순한 정치 이론서가 아닌 마을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체득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의 실천 경험을 녹여냈으며, “좋은 이웃”이란 소박한 시작점에서 출발해 주민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가꾸는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특히 광주와 광산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내일을 함께 그려보는 의미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마을에서 배운 정치, 자치가 진보라는 믿음을 한 권에 담았다”며, “좋은 이웃으로 시작해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진 이야기가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기념회는 지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 서남권, 반도체 새 심장 돼야”

강성휘 부의장,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남 이전 촉구

“반도체는 전기가 핵심입니다. 전남 서남권이 반도체의 심장이 돼야 하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반도체 산업의 남부 이전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계획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약 10GW에 달하는 전력 수요가 예상되며, 이는 원전 수기 규모로, 수도권 전력 공급 부담과 송전망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부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결국 ‘전기 산업’이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이 임지의 핵심 조건이다”면서 “해상풍력과 태양광, 수상태양광이 집적화된 전남 서남권은 반도체 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에너지 기반 권역이다”고 강조했다.

신안·영암·해남·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과 솔라시도 수상태양광을 연계할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RE100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강 부의장은 “에너지는 전남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데,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지금의 구조는 비효율적이다”며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산업을 옮기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목포를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의 배후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강 부의장은 “목포는 항만·물류·정주 인프라를 갖춘 서남권 중심 도시로,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교육·의료·문화 기능을 담당하는 배후도시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전남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선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박지원 양광을 연계할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RE100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5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의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당 광주시당, 새해 5·18민주묘지 참배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등 150여명 민주주의 가치 되새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5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의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배에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헌화와 분향을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도시이

자, 위기의 순간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을 분명히 보여준 곳”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기준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을 극복하고, 개혁을 완수하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답하겠다”며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